

# ‘성탄 합의’ 여야, 국정원개혁법·예산안 30일 처리

원내지도부 ‘3+3회동’

27일까지 합의안 도출

여야는 25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개혁특위간사가 배석, ‘3+3 방식’으로 진행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개혁과 관련, 여야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양당간사 간 합의를 조속히 끝내게끔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추가 논의를 통해 27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내 지도부의 전격 회동은 국정원개혁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지난 23~24일에 이어 이날도 접촉을 갖고 협의를 계속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회동을 시작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연말 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 우리가 대화를 나눠서 물꼬를 트자”면서 “예산안과 법안이 잘 처리돼 국민이 내년을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크리스마스인데 꼭 막힌 정국을 풀고 국민과 국회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응했다.

하지만, 여야는 국정원 개혁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국정원 개혁특위 양당 간사를 회동에 불러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조속히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했다.

국정원 개혁법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은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 규제 및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IO) 출입제 폐지다. 민주당은 심리전 규제와 IO 출입제 규제를 구체화해 법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여야는 국정원 개혁법안의

이와 함께 여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및 민주당이 요구 중인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여야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 “우리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법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 했고, 자폭(새누리당)

에서는 ‘힘들다. 조건부 면허 발급이면 충분한 게 아니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위 차원에서, 쌀 목표가격 문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차원에서 가동 중인 여야정 6인 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전·월세 상한제 등 기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요히 한 해를 돌아본 시간...차가 저 혼자 식었네



김은영의 '그림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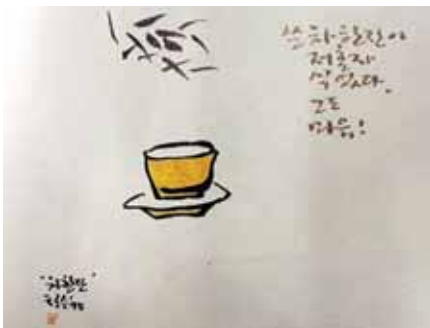
(57) 차 한잔

“저녁을 먹고 나면/허물없이 찾아가/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말할 수 있는/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마음놓고 보일 수 있고/약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있었으면 좋겠다...”〈유안진 ‘지란지교를 꿈꾸며’ 중에서〉

연말 송년모임이 잦은 때다. 인간관계가 넘쳐날수록 역설적으로 외로워진다. 인터넷, 트위터, SNS 등 디지털 인맥 과잉시대에 오히려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는 오붓한 시간을 갈망한다.

현대인들은 흔히 ‘고독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외로움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바로 그 길에서 고독을 누릴 기회를 놓쳐 버린다”고 안타까워했다. 나 역시도 여럿이서 왁자하게 만나는 모임에서 더 고독한 적이 있었고, 그 느낌이 싫어 더 명랑하게 수다쟁이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한해가 저무는 때에는 정



이철수 작 ‘차 한잔’

말 좋아하는 친구와 정겹게 ‘차 한잔’ 마시고 싶다. 그 친구가 자신이 어도 좋으리라. 내면과 대화를 나누며 번잡했던 한 해를 고요하게 뒤돌아보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한

하다. 관화작가 이철수(1954~ )의 작품 ‘차 한 잔’(1995년 작)은 홀로 차를 마시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80년대 민중 관화 작가로 이름을 높여온 작가는 자연과 인생을 사유하면서 그러한 모든 대상을 그리고 새기고 찍어오고 있다.

자신의 삶을 그대로 관화작업에 쏟아낸 작가답게 화면에 나타난 간결한 선묘의 형상화, 짧은 시어의 글귀가 때로 축비가 되어 깨우침을 준다. 관화가이자 시인이고 농부이자 문리를 깨친 도인의 그림 한 점이 연말이라 부산했던 이 마음을 정갈하게 다듬어준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 ‘박근혜표 예산’ 원안대로 처리될 듯

여야 의견 접근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정부3.0, 4대악(惡) 근절 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이 사실상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사업들을 재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안종범·이현재, 민주당 윤호중·윤관석 의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소회의제’를 구성했으며, 이 회의체 논의에서 상당수 예산이 사실상 정부안 수준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처럼 그동안 예산안 연례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졌던 ‘박근혜표 예산’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될 경우, 예산 심의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예산들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의 삭감 의견만 수용하고 예결위의 추가 삭감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정부의 실질적인 첫 예산안에 국정과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 측도 대응적 차원에서 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별도의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예산 69억원도 상임위 삭감분(20억원)만 수용하되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모두 의결하기로 했다.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정부3.0과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할

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 등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그대로 반영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은 상임위 삭감분(74억원)만 깎고 통과시키기로 했다. 4대악사법단속 예산 46억원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소위는 보류사업 120여건 가운데 80여건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새마을운동·국가보훈처·군사이번서령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자치발전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정 유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심대평·이하 자치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결론을 짓기 위해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논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위원 간에 찬반 격론이 벌어지면서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을 행정부 소속인 자치위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월권으로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맞섰다”며 “3시간 동안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즉,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찬반 여부를 논의하기도 전에 논의 자체의 적절성을 놓고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위원 간 의견차가 드러나면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심 위원장은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과위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에초 자치위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서 내년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공식 보고하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입법을 압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자치위 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실현을 뒷받침하려 했던 자치위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역신문발전기금 ‘정상화’ ... 예산조정소위서 판가름

국회 예산 심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고갈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정상화 여부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 심의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25일 예결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조정소위의 감액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돼가고 증액심사가 본격화하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증액한 지역신문발전기금도 조만간 심의 테이블에 오를 것

로 보인다.

이 기금은 애초 정부 예산안에서 50억원만 편성됐으나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새누리당 김세연, 민주당 김윤덕 의원 주도로 150억원이 증액돼 200억원으로 늘린 상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때 300억원 가까이 조성돼 있었으나 이명박정부 때 거의 편성하지 않으면서 점차 고갈돼 22억원만 남았

다. 때문에 기금이 내년에도 대폭 편성되지 않을 경우 기금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명맥만 유지할 위기에 처해 있다.

두 의원은 “정부가 지난 3년간 440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정부 출연금은 40억원에 그쳤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